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한국경제의 보수편향 후유증

경제계가 정치권의 비자금 공방에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벌들을 위시한 경제계는 가뜰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비자금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한편으로, 비자금 파문이 검찰수사로 확대될 경우 또다시 기업이미지 손상은 물론 경영활동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는 여야간 대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는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권이 소모적인 폭로전을 자제하고 정책대결로 경쟁수준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노태우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그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것은 물론 해외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WTO체제 하에서 부패라운드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태여서 비자금 파문이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패가 극심하다고 알려진 동남아에서조차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를 들고나와 난감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주장, 국익보호 차원에서 정치권이 기업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구습은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천절 특별사면까지 하면서 「경제살리기」를 외칠 때는 언제고 다시 「경제죽이기」에 나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재계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한국당이 왜 비자금 파문을 일으켰는지 재계에 묻고 싶다. 혹시 한국재벌들이 과거 동지로서의 자세를 다시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런지...

국민회의는 개혁 지향의 정당이고, 따라서 국민회의가 집권하게 되면 기득권세력은 기존의 특혜를 상실할 것이 분명하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한국당의 폭로전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YS 집권이후 「갱제」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현정부의 실정이 얼마나 큰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문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 대기업들조차도 YS의 「갱제정책」 또는 앞말과 뒷말이 전혀 다른 「이중 플레이」 그리고 X물은 개가 재물은 개 나무라는 「안하무인」에 대해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보수」와 「개혁」을 이분법적으로 논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원래 보수와 개혁은 정체성과 발전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본이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수와 개혁정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잡고 정책대결을 벌이며, 그 결과를 놓고 유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나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보수와 개혁이 「극과 극」의 관계, 즉 상호 융합하기 어려운 그리고 공존이 불가능한 대립개념으로 비취지고 있다.

왜 그러할까?

결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보수는 참다운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의 국가재산 나눠먹기 및 힘을 바탕으로 한 사유재산 갈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정책을 어떻게 펴서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국민 공통의 이익과는 전혀 상반된, 특정집단이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나아가 법적·제도적 그리고 관행적 틀을 통해 불로소득을 정당화 또는 당연시하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의 부동산 투기, 증권투기, 전국민의 5%에 불과한 특정세력에 의한 부의 독식현상 등이 그러한 예의 일부이다.

그러나 아타깝게도 보수 정치·관료집단을 제외한 경제계는 이미 국민들의 식견과 욕구 수준이 그러한 「한국적 보수」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간파한지 오래이고, 「한국적 보수」조차도 「갱제」가 아닌 「경제」가 올바르게 발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노·사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적 보수」의 정치가 더 이상 통할 여지가 없어지는 대신, 노·사의 대립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은 공정한 물과 함께 불로소득의 차단을 통해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시 다져야 하는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7/10/20>